

# 전남 자치단체장들 말 뿐인 ‘公約’…예산 확보는 ‘空約’

### 재정확보를 합평 5%·구례 19% 그쳐…지키지 못할 공약 남발 지적 진도·영암은 100% 넘어…전남 공약 이행률 46.53%로 최하위권

전남지역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초반 지역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도 정작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대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은 46.53%로, 전국 15개 시도 중 충북(41.23%)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서울은 69.98%로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은 66.39%로 2번째로 높았다.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1498개의 공약 중 207개(13.82%)가 완료됐을 뿐이다.

728개(48.60%) 공약은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 완료 후 끊이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0개(32.71%)였다. 일부 추진중인 공약은 44개(2.94%), 보류(5개·0.33%), 폐기(19개·1.27%) 등이었다.

폐기한 공약으로는 ▲산업단지 내 화장품 전문업

체 집적화(담양) ▲아동안심키가 시스템구축·공립치매 전담형 시설확충·가족보호센터 종합대책 수립(곡성) ▲주요현안 결정시 의견수렴을 위한 원탁회의구성·해조류 전시체험관 건립·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개설·목포방면 고속도로 진출로(IC)개설(고흥) ▲육상양식어업육성·서남권 노인건강타운건립·남양천 생태하천 복원(무안), 대동강 운리홍지-매동연결도로개설·함평천치복지재단 설립추진·전 군민 복지수요 전수조사로 맞춤형 복지 실현·장애인복지지원건립·청령명예가사관 확대운영·정비행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제’ 운영(함평) 등이 꼽혔다.

보류되거나 부진한 공약은 흥수조절지를 활용한 관광개발 조성(담양), 화순-광주 송정역산 셔틀버스 운행·스포츠 파크 조성(스포츠 과학센터 설립)·화순 천운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화순), 축산 클

러스터 연관 공공기관 유치(함평), 목욕·아미유 이용권 확대(영광) 등의 공약은 보류되거나 부진한 것으로 분류됐다.

특히 열악한 재정 여건에, 공약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임기 중 공약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담양,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경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36조 1284억 5700만원에 달한 반면, 확보한 예산은 49.29%(17조 8076억 9100만원)에 불과했다.

함평은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재정계획의 5.36%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구례(19.55%), 여수(20.84%) 등의 확보수준도 미흡했다. 수치로만 보면 민선 7기 남은 기간 공약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규모가 큰 전남지역 공약으로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및 국제항 개발 투자유치 추진(4조 6827억원·진도) ▲경도·화양지구조기개발지원추진(2조 8009억원·여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사업 조기 추진(2조 5859억원·완도) ▲경전선 시내구간 노선개발(지중화 및 노선변경 등) 추진(1조 7703억원·순천)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5269억원·여수) ▲여수·남해도로(해저터널) 건설(5040억원·여수) 등이었다.

예산 감시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예산 등의 개혁을 포함하지 않는 공약이라면 지키지 않을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초자치체들의 실정과 상황이 내놓은 공약과 맞지 않다면 공약을 수정하거나 사과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3년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

### 일본 기업 16곳 상대 소송 법원, 개인 청구권 제한적 판단 시민단체 반발 속 논란 불가피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 판결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미 예정됐던 판결 선고일까지 바뀌지 않고는, 10년 넘게 걸려 확정된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 대한민국의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

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여운택·신천수·이준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 바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당시 사건 피해자들은 2005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확정 판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는데 이날 재판부가 2년 8개월만에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선고기일도 변경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재판 사정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장, 판결 이후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의 격양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을 버텨내면서 받아낸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판결로 인권,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한 판결로 임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집단 산재 신청 7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광주 광산지사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관계자가 산재신청서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두환 14일 항소심 재판 방청권 당일 선착순 배부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방청권(33석)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 측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24일 재판의 경우 법원이 출석하는 소환장 송달을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열리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기일에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 관심사가 큰 재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없이 진행할 지는 미지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화순지역 장애인시설서 청소년 숨진 채 발견

### 은품 명자국...학대 여부 수사

화순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0대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오후 3시 20분께 화순군 동면엔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내 거실에서 A(18)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시설 직원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군 은 품에 명 자국과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한 병원측의 신고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은 수개월 전, 가족들에 의해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유족들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화순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 해당 시설 입소자(40~50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광주시청 등 4곳 압수수색

### 서부경찰,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 비위 의혹 수사 속도

이웅섭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 비위의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광주시청 비서실, 생명농업과, 주거지, 시청 인근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생명농업과는 광주세계김치축제 담당 부서로, 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비서실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전 운전기사 A씨는 최근 공직자 신분은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이웅섭 시장 당선 이

후 편의 제공을 대가로 제 3자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특히 광주시의 지역축제 대행업체 선정과 A씨의 고급승용차 제공 해택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여부가 입증될 경우 청탁 금지법이 아닌, 뇌물 수수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수사력을 집중하는 실정이다.

경찰의 광주시청 압수수색도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A씨

와 혐의 수행비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수행비서에게 금품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진 행사대행사 대표와 브로커 등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 업체·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된 상태다.

경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점쳐진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A씨 외에 다른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오다 추가 혐의를 찾아내 다른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주변으로 확대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요구도: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1타경 686	1	서구 화정동49번길38, 2층 214호 [쌍촌동, 근린시설] 쌍촌동도시형생활주택 16, 9685㎡		54,000,000 54,000,000	
[자동차, 중기]					
2021타경 66945	1	사들봉거지:전주시 완산구 평화1길 29 [평안동] 화동2가] 등록번호:87고4015 차량:포테111 연식:2018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보관장소:광주서부구로동531[하나로에프앤씨]
[기타]					
2020타경 73236		장성군 동화면 홍정리 620-44 4118㎡ 제1외 기계구 사출성형기 외 11식	공장용지	2,193,371,689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물탱크실]포 함, 기계구포함[ 일련번호8번공형 은도조절기1식, 10 번지속분쇄기는소 재불명, 타지번호 화면용정리620-17 번지에소재하는일 련번호8번공형은 도조절기1식, 일련 번호9번공형은도 조절기매각제외]
2020타경 13050	1	장성군 동화면 가정길 12 1층1,653,4125㎡ 2층989,5163㎡ 제1외와 물탱크실 105,8663 ㎡ [건물은공부상장성공동화면용정리620-44 ,620-47,620-49,620-51,620-52번지지상소 재화나련화장성공동화면용정리620-47번지 를제외한*장성군동화면용정리620-44,620-4 9,620-51,620-52번지지*지상소재] 장성군 동화면 홍정리 620-49 318㎡ 등소 620-52 60㎡	공장 공장용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2021타경 1153	1	북구 월동로28, 101동 7층 708호 [두암동, 아파트] 무등파크맨션 84, 85㎡	아파트	144,000,000 144,000,000	
2021타경 1436	1	남구 대남대로85번길3, 101동 2층 201호 [쌍촌동, 방림동, 방림명치로도넛] 84, 882㎡	아파트	362,000,000 362,000,000	현황조서서[2021.5.24차]상관리비 약130만원미납
2021타경 60930	1	광산구 어등대로665번길27, 102동 11층 1107호 [소촌동, 서라야파트] 59, 965㎡	아파트	129,000,000 129,000,000	2021타경2057[중 복]
2021타경 61407	1	동구 지호로68, 1층 2호 73.35㎡	아파트	123,000,000 123,000,000	
2021타경 61582	1	북구 매곡로69번길22, 201동 8층 805호 38.28㎡	아파트	79,800,000 79,800,000	
2021타경 62486	1	북구 능안로29번길30, 102동 7층 701호 [오치동, 한국아빌리움] 120, 6399㎡	아파트	398,000,000 398,000,000	현황조서서[2021.3.25차]상관리비 약60,000원미납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594	1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688-1 8739㎡ [수목]답 배나무등]포함]	답	485,834,000 485,83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배나무등]포함]
2021타경 1566	1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705-1 542㎡	전	6,341,400 6,341,4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21타경 61261	1	나주시 세지면 죽들리 신9 992㎡ [공유지나 규호지분1/3전부, 제시외수목매각제외, 연고 미상보유소재]	임야	5,952,060 5,952,060	지분매각, 공유지 우선매수권행사1 회로제한
2021타경 62042	1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신56 28412㎡ [공유 지정전화지분1/2전부]	임야	14,206,000 14,206,000	지분매각, 공유지 우선매수권행사1 회로제한

- 매각기일 : 2021. 6. 22. [화] 10:00
- 매각결정일자 : 2021. 6. 29. [화] 16: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 매각방법
- 입찰방법에 비한 기일당첨자에 사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함]의 보증금과 발행의 자기유치 또는 현금 준비금이 지급보증금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서와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리를 개시하여 최고가격에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격매수고지인으로 공고하고,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를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 최고가격매수고지인 조차유치매수고지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자들은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에 증빙하는 즉시 반환합니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일도 통상 통상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통상 통상 매수인에게 매각허가 및 지양지, 비통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예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등기, 가압류, 가집행은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인도나 가압류 및 압수소멸을 위해서는 등본과 지등기등본을 납부한 후 등본제청수필증과 지등본을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용서를 반환해 제출하면 매각허가 및 인도를 실시합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채무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은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매각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비하여 최선가격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2주 전 법원정신인고를 미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법외특수관계에 마인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인명부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입찰인도에 불응하는 경우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법원에 불응이 사유를 설명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용서를 반환해 제출하면 매각허가 및 인도를 실시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결정일당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나옴에 대해서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에 필요한 인도신분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 인도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보증금에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 지취특약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매수고지인으로 공고된 매각허가결정일 후 지취특약사항을 제출할 한 사항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특약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허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특약사항이 확인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신병에 공과되는 물건은 최후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출품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ரி함을 기시한 후 공고일 법원에 비준(매각결정일)을 받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 채무를 방치하면 매각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합니다.
-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에 불응할 경우 매각허가 및 인도에 관한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의무로 알려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열람가능한 항목을 열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문의하여 게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매각)비준(매각결정)일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